

북한 “에너지” 담론의 변천사

박민주 숙명여자대학교¹

김석향 이화여자대학교²

요약

이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공적 영역에서 외래어 “에너지” 표현이 급증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그 시대별 의미의 변화를 밝히고자 했다. 해방 이후 2018년까지 『로동신문』 기사 제목에 “에너지” 단어가 등장하는 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당국은 2000년대 초반까지 석유파동, 해외 원자력 개발사례 등 주로 국제적 동향을 보도할 때 간헐적으로 “에너지”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핵심협 의혹에 핵에너지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대응하면서 “에너지” 담론도 급증한다. 2010년 이후 노골적으로 핵 보유를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에너지 관련 해외동향 담론은 2002년 “악의 축” 규정 이후 수량이 증가하였다. 담론 내용은 미국과 서방세계를 비난하는 반미반제 성격이 뚜렷해지는 한편 미국과 에너지 분쟁 중인 러시아와 중동의 에너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언설이 등장한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자본주의 국가를 정치적으로 비난하는 분량을 줄이고 해당 국가의 대체에너지 개발 동향을 보도하는 방식으로 내용이 달라진다. 셋째, 김정은 집권 이후 “에너지” 담론은 급증하였고 내용도 북한 외부보다 내부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주민에게 에너지 문제와 관련하여 던지는 지침도 달라진다. 주로 절약을 권하던 담론은 2010년대 초반부터 자립을 강조하고 2015년 이후 헌납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변모한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70여 년 동안 북한당국이 에너지 부족의 해결방안을 근본적으로 모색하려 했던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집정은 집권 이후 마땅히 당국이 책임져야 할 기간 사업 영역까지 주민에게 떠맡으라고 강요하면서 민간의 부담과 해외 의존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흐름을 감안할 때 향후 북한 에너지 부문의 자립은 상당히 요원해 보인다고 하겠다.

주제어

북한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담론, 북한 재생 에너지, 자립

* 제1저자: 박민주, 제2저자: 김석향

1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연구교수(breadhelen@sookmyung.ac.kr)

2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원장(feelfree@ewha.ac.kr)

1. 서론

1. 문제제기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당국의 언설 곳곳에 “에네르기” 담론이 자주 나타난다. 북한당국은 2013년 “재생에네르기법” 제정을 필두로 2014년 들어 국가과학원 산하 “자연에네르기 리용개발센터”를 “자연에네르기 연구소”로 기구를 확장하며 대규모 청사를 신축하였다. 김정은은 2014년 신년사에서 처음으로 “에네르기” 용어를 사용하며 “자연에네르기를 이용하여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주문하였다. 신문 기사에서도 “에네르기” 표현의 출현도 빈번해졌다.

그동안 북한당국이 외래어 순화와 일제 잔재 청산을 강조하면서도 막상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시” 수준의 신년사와 공식문서, 법률 명칭에서 “에네르기” 같은 외래어 단어를 사용한 점은 흥미롭다.³ 북한당국이 일 본식 외래어 발음을 그대로 사용하는 단어가 간혹 있었지만 최근에 “에네르기” 만큼 공적 영역에 폭넓게 등장하는 용어는 드물다. ‘전력, 전기, 석탄, 발

3 ‘에네르기’는 일제강점기의 표기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과학기술부문에서 표본으로 삼은 소련(러시아어)에서 에너지는 “에네르기”가 아닌 “에네르기야”이다.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Energy’ 용어 발음의 국제적 합의가 “에네르기” 대신 “에너지”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황성규, 2003) 북한에서는 여전히 “에네르기” 형태를 고집한다. 북한이 과학기술 부문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일본 유학파 출신 인재를 활약에 크게 의존했던 점이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전소' 등 기존의 에너지 담론에서 널리 활용하던 용어 대신 포괄적인 “에네르기” 단어를 사용하는 점도 예전과 다르다.

1945년 분단 이후 2020년 1월까지 북한당국의 공식적 언설을 돌아볼 때, 김정은 집권 이후 뚜렷하게 드러나는 “에네르기” 천착 현상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북한당국은 분단 이후 시대적 배경에 따라 “에네르기” 담론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가? 이번 연구는 두 가지 질문에서 출발한다. 분단 이후 오늘 날까지 북한의 역사를 과학기술 관점에서 돌아보면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이 공적 영역에서 “에네르기” 담론을 강조하는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⁴

2. 선행연구 검토

2019년 11월 14일 기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데이터베이스 및 북한 과학기술네트워크(NK Tech) 홈페이지 내 북한 과학기술 연구목록 검색 결과, 북한당국의 에너지 관련 담론이 지닌 진의를 분석하는 선행연구는 찾기 어려웠다.⁵ 이번 연구처럼 “에네르기” 담론 전반을 다룬 논의는 없었다. “에네르기” 단어가 등장하지 않더라도 전기, 석유, 석탄 등 에너지 담론에 숨은 북한 당국의 의도를 살펴본 연구도 나타나지 않았다. 2000년 이후 발표한 국내 사회 과학 부문 연구물을 토대로 “북한 and 에너지” 방식으로 검색하면 경제적 측

4 이 연구의 목적은 “에네르기” 단어의 급증 현상을 살펴봄으로써 김정은 시대 에너지 정책의 역사적 특성을 읽어내는 것이다. 오랜 기간 ‘전력, 전기’가 대표해 온 북한 에너지 담론 전체를 “에네르기” 단어만으로 살펴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는 뜻이다.

5 북한당국의 “평화적 핵발전” 담론을 분석한 연구는 북핵 문제가 비교적 ‘외국’ 수준이던 시기에 수행한 것으로 원자력 발전 정책에 주목한다. 그러나 2019년 오늘날, 북한당국이 그간 펼친 ‘원자력 발전’ 논리가 결국 핵무기 보유라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들 기존연구처럼 북한당국의 담론을 문자 자체로만 분석하는 것은 제한적인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종구(2018), 정현숙(2018) 참조.

면에서 북한 내 에너지 부족 문제를 다룬 보고서가 가장 많았다.⁶ 이런 연구는 KDI와 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한 것으로 에너지 자원 수출입 및 생산량, 에너지 발전량 등 양적 실태와 북한당국의 1차적 대책을 분석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지금까지 기존 연구의 흐름은 북한당국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방향을 가늠하는 대신 표면적 현상에 집중해 왔다. 이제 에너지 부문과 관련하여 경제 관점의 접근이나 전력 현황 도출을 넘어 정치, 사회, 과학기술 변화에 따라 북한당국이 설정한 구체적 목표를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 편의 연구에서 지난 70년간 북한의 에너지 정책 전반을 조망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북한당국이 “에네르기” 표현을 사용할 때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는지 분석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려 한다.

II. 분석대상자료 소개와 유형분류

이 연구는 해방 이후 2018년 12월 말까지 북한당국이 『로동신문』 지면을 통해 “에네르기” 담론을 어떻게 생산하고 유통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1946년 11월 1일 『청로』 창간 이후 2018년 6월 30일까지 『로동신문』 내용을 전부 분석대상 자료로 삼았다. 2019년 10월 2일 기준으로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확보 가능한 연도별 『로동신문』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⁶ 과학기술 부문 연구의 경우 에너지부문 남북교류협력 방안, 북한 에너지와 대기오염문제, 북한 에너지 현황 등을 다룬다. 주요 연구는 김경술(2018), 빙현지·이석기(2017), 김경술(2015), 안세현(2013).

[표 1]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로동신문』 현황 (2019년 10월 2일 기준)

발간연도	소장본 발간월일	비고
1946년	12월 6일	1946년 11월 1일 창간
1947년	3월 1일~5월 29일	
1948년	전호 미소장	
1949년	1월 24일~2월 27일	1949년 9월 1일 『로동신문』 으로 개칭
1950년	3월 1일~9월 14일	
1951년	3월 20일~12월 31일	
1952년	3월 1일~12월 31일	
1953년 이후	1953년 1월 1일~2018년 6월 30일 전호	

『로동신문』 기사는 북한당국의 공식 입장을 대내외에 표명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로동신문』 기사 내용은 북한당국이 당면 상황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방식이나 주민에게 전하려는 메시지 등을 분석하는 자료로 적당하다 하겠다.

이 글을 쓸 때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제목에 에네르기라는 단어가 들어간 『로동신문』 기사를 추출한 뒤⁷ 각 기사마다 오류가 있는지 점검하였다. 결과적으로 1954년 8월 13일자 기사에 처음으로 에네르기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 이후 2018년 6월 말까지 해당 유형의 기사가 총 164건 나타났다. 5년 단위로 보도횟수를 집계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그림 1]에 정리했다. 다만 2018년은 6월 30일까지 신문기사만 데이터베이스에 나오는 만큼 2018년 12월 31일까지 등장하는 기사를 모두 계산하면 2015-2018년 구간의 보도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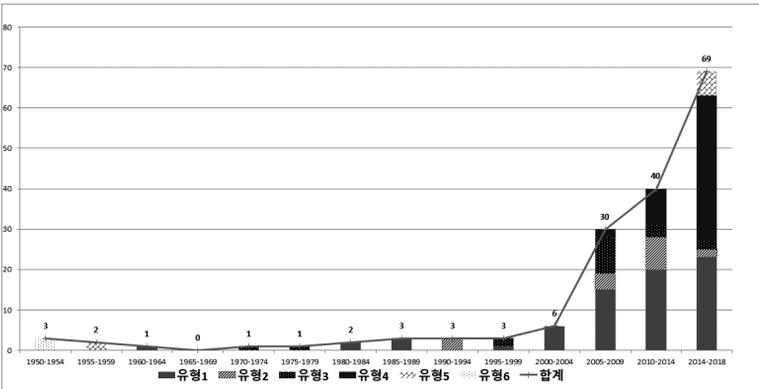
164건의 신문기사 제목과 내용을 살펴본 결과 총 6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6개 유형을 간략하게 설명한 내용은 [표 2]에 정리해 두었다.

7 지면 최상단에 “에네르기” 용어를 포함한 구호가 등장하고 하단에 관련 기사 여러 건이 나타나는 경우 해당 지면 전체를 1건의 기사로 계수하였다. 그 이유는 70여 년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표 2] “에네르기” 담론의 유형

유형	제목	설명
제1유형	해외기술사례	다른 나라의 에너지 관련 기술을 보도한 기사로 조선중앙통신의 취재내용을 단신으로 게재하거나 글쓰기가 각 10문장 내외의 해외 사례를 여러 건 기술한 기사
제2유형	핵발전 관련	핵에너지와 관련한 해외 사례, 북한당국의 핵 에너지 발전 관련 주장 등 핵을 특정하여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
제3유형	해외에너지분쟁 (“반미반제”)	석유파동 등 국제 에너지 분쟁을 다루거나 산유국과 미국의 전쟁 등을 보도하는 유형으로 미국과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비판을 목적인 기사
제4유형	북한 내부 에너지 기술 선전	북한 내부의 에너지 발전 상황을 선전하거나 관련 정책과 정치적 지도를 칭송하는 기사
제5유형	대외에너지교류	북한과 다른 나라의 에너지 관련 교류를 보도하는 기사로 대다수가 인적교류를 보도한다.
제6유형	기타	산업동력이 아닌 사람의 힘을 지칭하는 등 “에네르기”를 과학기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의미로 사용한 기사

5년 단위로 관련 기사의 보도 빈도를 살펴보면 많아야 최대 3건 정도에 그치던 추세가 2000-2004년 기간에 처음으로 7건이 나타나면서 확연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드러난다. 5년 주기로 유형별 보도 수량을 다음 표와 그래프에 나타내 보았다. 해외 기술을 다룬 제1유형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북한 내부 에너지 관련 상황을 칭송하는 제4유형이 자주 등장했다. 세부 내용과 유형을 기준으로 변화 양상을 분석하면 1950년-1969년, 1970년-1989년, 1990년-1999년, 2000년-2004년, 2005년-2009년, 2010년 이후 총 5개 시기로 담론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 『로동신문』 기사 제목에 “에네르기”가 등장하는 빈도

III. 북한 “에네르기” 담론의 시대별 변화

1. 1950년-1969년: 대중의 힘과 소련 과학기술 추종

『로동신문』 지면에 “에네르기” 담론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54년 8월 13일이었다. 당시 북한당국은 전후복구를 주도하면서 “조선 인민의 위대한 에네르기”⁸ 같은 표현으로 주민들 모두 도시와 산업현장 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산업동력으로서 에너지라는 의미 대신 인간의 능력을 뜻하는 단어로 에네르기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이다.

북한에서 에네르기가 산업동력을 의미하는 담론으로 처음 등장하는 시점은 1956년 5월이다. 당시 상황은 미국과 소련이 핵개발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었다. 『로동신문』 기사에도 북한 내부의 현실적인 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대신 선진기술사례를 언급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북한당국은 1955년 말-1956년 초 당시 원자력 관련 연구조직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과학원 조직 개편을 시행했다(강호제, 2013). 1956년 3월 26일에는 북한과 중국, 소련, 동독 등 11개국이 소련 두브나(Dubna) ‘연합핵연구소(Joint Institute for Nuclear Research)’ 설립동의서에 서명하는 일이 있었다.⁹ 같은 해 5월 14일부터 모스크바에서 열린 고에너지 물리학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High Energy Physics) 행사에 북한 과학자 몇 사람이 참석하였다. 북한당국은 이틀 후 『로동신문』 기사에 이 내용을 보도하였다. 1958년에는 미군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설치하자 『로동

8 1954년 8월 13일, “위대한 목적은 위대한 에네르기를 낳는다. 대중의 창조력과 적극성을 발양시키라!”; 1954년 12월 25일, “위대한 목적은 위대한 에네르기를 낳는다”; 1954년 12월 31일, “조선 인민의 위대한 에네르기가야의 창조자이다”.

9 JINR 홈페이지 <http://www.jinr.ru/history>(검색일: 2016년 4월 25일)

신문』지면에 “소련의 인공위성들이 가지는 거대한 력학적 에네르기”¹⁰ 소식이 나온다. 수소폭탄 제조공정에 필요한 플라즈마와 관련하여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자 1964년 5월 7일에 “무진장한 에네르기 원천” 플라즈마를 소개하기도 한다. 북한당국은 같은 글에서 “하늘의 불을 훔쳐다 준 프로메테우스 (중략) 신화와는 달리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고 과학기술을 발전하게”¹¹ 만드는 존재이므로 독창적 방법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의 수소폭탄 실험이 이어지면서 북한당국은 핵 기술에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의 『로동신문』 언설에는 당면한 에너지의 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단기적으로 소련의 핵우산을 활용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자체 핵기술을 보유할 생각을 드러낸다. 북한당국의 관점에서 전쟁 직후 동유럽 “사회주의 형제나라에서” 제공하는 무상지원이 많고 구상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에너지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다.

2. 1970년-1989년: “에네르기” 부문에서 주체 주장

1964년 이후 약 9년간 제목에 “에네르기”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1973년과 1979년에 한 차례씩 『로동신문』 지면에 등장한다. 1973년과 1979년은 세계적으로 제1차 오일쇼크와 제2차 오일쇼크가 발생했고 북한 내부에서 주체사상이 사회 전반을 장악해가던 시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당국은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소위 “주체 과학” 천착 경향을 점점 더 심하게 드러냈다. 당시 북한당국은 우호관계인 비동맹국 사례를 보도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에네르기” 담론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풍부한 지하자원들이 외국독점자본의 수중에 장악되어 그들의 리윤취득의 원천으로 되는

10 1958년 5월 22일, “‘소련의 인공위성들이 가지는 거대한 력학적 에네르기’”.

11 1964년 5월 7일, “무진장한 에네르기 원천 플라즈마”.

것은 참을 수 없는 일 (중략) 이스라엘 침략자들에게 빼앗긴 아랍령토를 해방하며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는 것이다. (『로동신문』, 1973년 9월 1일)¹²

위의 인용문을 보면 북한당국이 “에네르기” 담론을 반제·반미 논리와 강하게 결부시키면서 “에네르기에서 주체를 세워야” 한다는 언설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2차 석유파동 시점에는 북한당국이 제1차 파동 당시보다 미국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미국의 에너지 개발 정책에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아래 인용문은 세계 과학기술의 패권이 미국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북한당국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미국은) 석유생산지들을 틀어쥐고 석유자원을 닦치는 대로 약탈하고 (중략) 자본주의 경제 전반을 파국으로 몰아간 제국주의식민주의자들 (중략) 국내연료자원과 열핵에네르기, 태양에네르기, 지구열 등 여러 가지 에네르기 원천들을 탐구하고 개발하여 석유대신에 리용한다. (『로동신문』, 1979년 4월 8일)¹³

1980년 이후 북한당국은 해외의 대체에너지 개발사례를 살펴보기 시작한다. 2차 석유파동 이듬해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서 북한당국은 “새로운 자원들을 적극 개발리용” 하라고 주문했다. 이런 흐름을 배경으로 1981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태양에너지 기사가 나타났다. 신문은 수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 건설 지역은 제한이 있지만 태양에너지는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으며 자원의 양과 이용기간이 무제한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다만 태양에너지

12 1973년 9월 1일, “아랍나라들은 자기들의 에네르기자원을 완전히 장악”, 북한은 이 기사를 발표하고 4일 뒤인 1973년 9월 5일부터 8일까지 알제리에서 열린 비동맹 정상회의에 참여하였다(“오늘부터 8일까지 石油 파동 속 非同盟 頂上 회의”, 1973년 9월 5일자 경향신문).

13 1979년 4월 8일, “자본주의경제를 파국으로부터 건져보려는 에네르기 소동”

자체가 개발·설치 비용이 높고 기술력은 대체로 서방 선진국이 지니고 있어 상용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북한당국이 NPT 가입 직후 원자력 에너지 관련 언급을 한 내용이다. 1985년 12월 19일 지면은 불가리아가 “매장된 니탄과 갈탄을 채굴하고 원자력 발전소 건립에 힘쓰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북한 내부 기업소에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며 생산에 선진 설비와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보도하였다. 당시 북한 내부에서는 석탄생산량이 계속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석탄 심부화¹⁴ 현상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화력발전 설비의 효율도 떨어졌다. 이 시점에 북한당국이 원자력 발전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에너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력 발전 방식을 대안으로 떠올렸던 것 같다. NPT 가입 이후¹⁵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지 않으려 명분을 만드는 언술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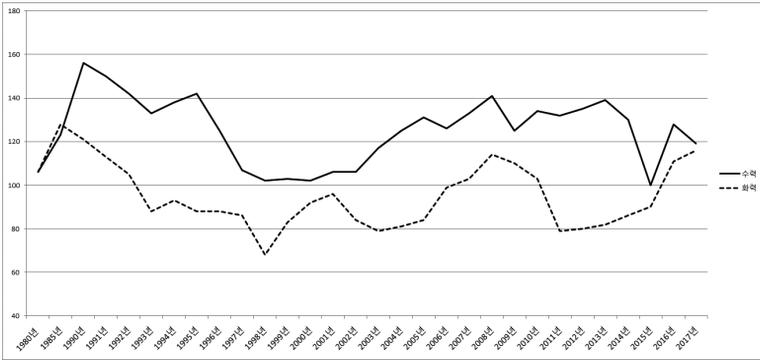
1980년대 중후반부터 북한당국은 수력, 풍력에너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선진 기술을 받아들여 북한 “실정에 맞는” 대체에너지에 관심을 두라는 내용이 등장한다. 수력에너지의 경우 “세 면이 바다로 되어있고 크고 작은 강하천이 많은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수력자원이 매우 풍부하다”는¹⁶ 측면에서 외부기술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 시점은 북한당국이 화력발전에서 수력발전으로 전력 생산 정책을 선회하는 시기와 일치한다. [그림 2]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 사이 북한 전역의

14 석탄 심부화 현상이란 채탄을 반복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탄광을 더욱 깊이 파내야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자연스레 비용이 증가하고 안전 문제도 심각해진다.

15 북한당국은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1992년 1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1992년 5월 IAEA 임시사찰을 통해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 양과 북한당국의 신고 내용이 불일치함이 밝혀졌다. IAEA가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북한은 NPT를 탈퇴를 선언하였다. 이후 미국과 북한은 북핵 포기와의 그에 따른 지원을 주제로 오랜 협상을 지속하였으나 결국 2003년 1월 10일 북한당국은 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16 1987년 8월 9일, “수력에네르기의 리용과 그 발전주제”

발전량에 있어서 수력발전이 화력발전을 앞지르기 시작했다.¹⁷



[그림 2] 북한 수력 및 화력 발전 추이

3. 1990년-1999년: “에네르기” 담론을 통한 핵 위기대응

1992년 이후 북한당국의 “에네르기” 담론에 “핵” 관련 내용이 등장한다. 북한당국이 1985년 NPT 가입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989년부터 북한을 ‘A급 감시지역’으로 주시하고 있었다. 1990년대 초반 북한당국은 핵무기 개발이 탄로 날 위기에 처하자 “평화적” 목적으로 핵을 사용한다고 변명하기 시작한다.¹⁸ 1992년 6월 18일 IAEA 관리이사회 회의에서 북한 대표단장 오창림은 북한당국이 NPT 기조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목표로 삼는다고 주장하였다. 북한당국의 논리는 다음 인용문에 잘 나타난다.

17 원자료: 통계청 북한통계(<http://kosis.kr/bukhan/index.jsp>, 2019년 11월 1일 기준). 다만 2017년 8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이후 화력이 수력을 근소하게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해당 내용은 다음 참조, 2019년 11월 13일, 연합뉴스 “석탄 수출길 막힌 北, 화력발전으로 전력생산 독려”

18 1992년 6월 22일, “우리는 핵에네르기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리용함으로써 핵무기 전파방지조약에 의하여 지닌 국제법적의무에 충실할 것이다”, 1992년 7월 11일, “북조선은 핵에네르기를 평화적 목적에만 리용하고 있다”, 1994년 11월 13일, “핵에네르기에 의한 전력생산”

(우리는) 자원성의 원칙과 적극적인 협조정신, 담보감시대상으로 되지 않는 대상들도 다 공개하는 대담한 신뢰조성조치, 의심되는 우리 나라의 입의의 장소와 시설들을 참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입장을 지닌다 (중략) 한다면 하는 것이지 결코 빈말을 하지 않는다 (중략) 수력과 화력에 의한 발전소 건설을 기본으로 하면서 원자력발전소도 건설 (중략) 우리의 핵시설들이 국제원자력기구의 담보 감시하에 있으므로 안심해도 될 것이다. (중략) 남조선에 있는 미국의 핵기지와 핵무기에 대한 사찰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검증에서 제외될 수 없는 근본문제이다. (『로동신문』, 1992년 6월 22일)¹⁹

1993년 북한당국은 국가과학원 산하 “자연에너지 개발리용센터”를 설립하며 대체에너지 분야에 관심을 표명했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 이후 1994년 11월 13일에는 “핵에너지를 전력생산부문에 널리 리용하는 것은 오늘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하며 우라늄 235를 예로 들어 원자력 발전과정을 서술하였다. 문제는 폭발력 높은 우라늄 235는 원자력 발전보다 핵무기의 주성분이라는 점이었다. 결국 이 기사는 전력생산이 아니라 핵무기 제조과정을 설명하는 글이었다. 북한당국이 원자력 발전을 설명하려 했다면 주성분인 우라늄 238을 사례로 드는 통상적 방식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었다.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에 이어 러시아와 중국의 경화결제 요구, 기존 산업 시설의 낙후, 자연재해 등이 겹치면서 “고난의 행군” 기간에 접어든다. 에너지 문제도 심각해졌다. 당시 북한당국은 “에너지” 담론을 통해 두 가지 주장을 한다. 첫째, 미국을 비롯한 서구 자본주의 사회가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자원을 침탈해서 당시 상황이 벌어졌다고²⁰ 주장한다. 이런 방식의 반미반제 담론은 북핵 문제가 심각해진 2000년대 후반 더욱 자주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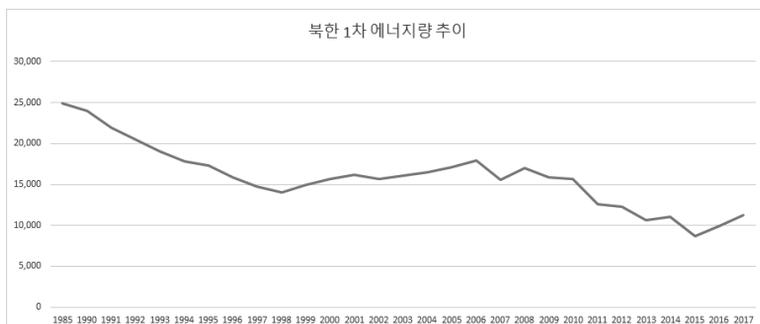
19 1992년 6월 22일, “우리는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리용함으로써 핵무기 전파방지조약에 의하여 지닌 국제법적의무에 충실할 것이다”

20 “에너지가 쟁탈 마당으로 변한 중앙아시아(1997년 5월 21일)” “미국의 독점자본의 침투와 그 영향력의 확대(는 러시아와 같은 대국에게도) 엄통을 파헤치는 것과 같은” 고통을 준다고 서술해 놓았다.

타난다. 둘째, 주민과 기업소 스스로 에너지난을 해결하라는 ‘절약’ 강조 유형이다. 당시 북한당국은 에너지 개발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각 기업소와 기관 단위에 “주인답게” 에너지를 절약하라고 강조했다.²¹ 에너지 절약 담론은 2000년 이후 잠잠하다가 2010년 이후 자립 담론으로 다시 등장한다.

4. 2000년-2004년 : 중국 및 러시아에 의존 시도

북한당국의 “에네르기” 담론은 2000년 이후 등장빈도가 증가하고 해외 사례를 보도하는 제1유형이 함께 증가한다. 이런 조치는 [그림 3]처럼 1980년대 중후반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한 1차 에너지 생산량과 관련이 있다.²²



[그림 3] 북한 1차 에너지량 추이

21 “창광산려관 일군들과 그 연구자, 자연에네르기 개발리용센터 연구사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먼적외선(원적외선)단 열내화벽돌을 만들어 막대한 전기를 절약하게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1998년 3월 26일, “에네르기 절약에서 큰 문제를 풀었다”

22 원자료: 통계청 북한통계 (<http://kosis.kr/bukhan/index.jsp>, 2019년 11월 1일 기준). 다만 2010년 이후 1차 에너지 감소는 조금 더 복잡한 결을 보인다. 병현지·이석기(2017)는 2010년대 북한 내부 1차 에너지 감소가 내부에서 사용해야 할 석탄을 중국에 수출해버리는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2010년 이후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량은 3배 이상 증가했는데 여기에 북한 내 석탄사용을 줄인 양도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다.

북한의 1차 에너지 생산량은 1980년대 중후반 최고 수준을 기록하지만 그 뒤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석탄의 심부화 현상, 1990년 초중반 대규모 수해로 인한 탄광 피해, 핵개발로 인한 대북제재와 유가상승에 따른 원유수입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2000년대 초중반 “에네르기” 담론은 대북제재 속에서 ‘탈(post) 고난의 행군’ 단계의 북한당국이 중국과 소련에 의존하는 전략을 보여준다. 당시 북한의 “에네르기” 담론에 나타나는 특징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체에너지 사용 방식이나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칭송하는 방식이 많다는 점이다. 2000년 북한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북한당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계개선을 추진했다. 김정일은 2000년 이후 중국을 방문하고 러시아와 우호선린협조조약을 체결하였다. 2001년에 장쩌민이 방북했고 김정일은 러시아를 답방하였다. 1990년대 소원했던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 관계는 우호관계로 변하였다.

2002년 연두교서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미국의 대북제재 강도가 높아졌다. 그 해 6월 12일자 『로동신문』 기사는 5월에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하여 “세계지배를 추구하는 미국은 세계의 주요 에네르기자원지대들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수립하려” 한다고 해석하였다. 반면 러시아는 “목줄을 조이려 드는 미국의 책동에 대처하면서 응당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2004년 10월 27일 지면에서는 “미국의 범죄적인 이라크 전쟁으로 중동지역정세가 불안정해져... 많은 나라들의 사회경제발전이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재생에너지 사례 칭송 보도는 전체의 71.4% 수준에 이른다. 2004년 5월에는 “호금도 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새 중앙령도집단의 령도 밑에” 태양에너지 개발사업을 시행한다고 보도하면서 중국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태양열에너지열수기생산국” 같은 표현으로 칭송하거나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호평하였다.

당시 북한당국의 “에네르기” 담론이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은 “환경보호” 용어를 자주 사용하면서 화석연료를 대신할 대체에너지에 관심을 표현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런 담론은 2000년 이후 북한당국이 환경보호와 관련한 법률을 신설·수정했던 동향과 관계가 있다. 북한당국은 2000년 환경보호법을 수정하면서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국가는 환경보호관리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 발전시키며 공업을 비롯한 해당 경제부문이 현대적으로 발전하는 데 따라 환경을 더 잘 보호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이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린다.

환경보호 관련 내용이 많아지는 양상은 1990년대 중반 자연재해로 북한 전역에 걸쳐 삼림 파괴와 수질 오염 문제, 광산 피해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환경보호형 에네르기” 소개 양상도 나타난다.

최근 여러 나라들에서 태양열발전설비, 풍력발전설비 등 새로운 환경보호형 에네르기 발전설비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주로 석탄이나 석유를 통해 화석연료가 탈 때 생기는 탄산가스, 메탄가스, 이산화질소 등 온실효과가스와 산성물질들이 대량 방출되어 지구의 생태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과 관련된다 (중략) 태양에너지발전에는 조수력발전, 파도력발전, 태양온도차발전이 있다. 조수력발전은 1996년에 프랑스가 24만 kW짜리 란스조수력발전소를 처음 건설한 후 (중략) 많은 나라들에 퍼져 (『로동신문』, 2003년 6월 1일)²³

위의 인용문에서 북한당국이 중국과 러시아 사례만큼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프랑스와 캐나다를 언급하는 등 재생에너지 사례에 관심을 보였다. 문

23 2003년 6월 1일,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에네르기개발과 그 리용”.

골(2003년 10월 6일), 티베트 자치구(2004년 10월 27일) 사례와 더불어 비동맹국의 재생에너지 개발사례도 소개했다. 당시 북한당국은 “환경보호” 논리를 내세웠지만 내부의 석탄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고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도 시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부에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석탄을 중국에 수출하기 시작했다. 결국 “환경보호형 에네르기” 답론은 중국 수출로 석탄이 부족해질 것을 대비하여 대중에게 절약을 강조하려는 언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²⁴

5. 2005년-2009년: “에네르기” 답론 확대

2000년대 후반 『로동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에너지 관련 보도횟수가 증가한다. 답론 유형도 다양해져 제1유형과 제2유형, 제3유형 중심으로 기사를 게재하는 현상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

가. 해외사례 보도 확장

해외 에너지 기술 사례를 보도하는 제1유형은 이 기간 전체 “에네르기” 답론의 50% 수준을 차지한다. 하나의 사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대신 조선중앙통신 소식을 단신으로 전하거나 한 편의 기사에서 여러 나라 사례를 나열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2000년대 초반 중국과 소련에 집중했다면 2000년대 중반부터 북한당국은 에너지원 고갈, 유가상승 문제를 제기하며 비동맹국 사례를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한다. 전통적으로 북한과 긍정적 외교관계를 유지해 온 쿠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케냐, 탄자니아, 싱가포르, 모로코, 이집트, 콩고, 짐바브웨, 잠비아 등 비동맹국가, 일부 아시아-아프리카국가, 아랍권 사례를

²⁴ 북한당국이 중국,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회복하며 원유수입을 용이하게 해보려 시도한 것 같다. 다만 2000년 이후 북한 원유수입량 통계에서 큰 변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거론한다. 이런 언설은 해당 국가들이 “오랜 세월에 걸치는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자기의 원유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 리용하지 못하였다”고²⁵ 하는 등 은근히 반미·반제 논리를 전하려 한다. 미국이 유가상승을 유도한다고 비난하면서 석유 대신 정치적·경제적 자립을 위해 수력, 원자력, 생물연료, 야자기름, 태양열, 지열 이용 등을 개발하는 다른 나라 사례도 언급한다.

미국의 반테로전의 주요 목적의 하나는 세계원유지대들을 장악하고 원유독점권을 수습하는 데 있다 (중략) 이것은 원유생산과 거래를 저애하며 원유가격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원유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 풍력에네르기 개발과 생산은 많은 나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중략) 브라질과 스웨리에, 벨지끄 등 여러 나라들에서 에타놀과 메탄가스를 비롯한 (중략) 파푸아 뉴기니아, 피지, 쿠키제도, 사모아, 통가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한 해 동안에 원유수입에만도 8억달러 US\$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로동신문』, 2006년 7월 8일)²⁶

2009년 이후 제1유형 논리에 약간 변화가 나타났다. 2009년 5월 4일 지면에는 에너지 개발사례 범위를 아프리카나 개발도상국, 비동맹국가에 한정하지 않고 서유럽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로 확대하였다.²⁷ 같은 기사에서 특정 국가 언급이 없이 에너지 관련 기술과 물품을 소개하는 내용도 등장한다.

25 2006년 7월 16일, “에네르기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26 2006년 7월 8일, “활발히 벌어지는 에네르기 개발 사업”.

27 앞서 인용한 2003년 6월 1일 기사에서는 한 문장으로 언급만 하고 있는데 2009년 5월 4일 지면에서는 “프랑스, 이탈리아” 사례를 보다 자세히 서술한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2007년, 북한당국은 국제 NGO인 EEMP(Environmental Education Media Project)의 도움을 받아 친환경 기술과 관련한 강습회를 마련했다. 또한 이 기구의 도움을 받아 재생·원자력에너지와 친환경 기술, 그 효과를 소개하는 단행본 『생태기술』을 출판하였다.

나. 반미반제 담론

2005년-2009년 기간에는 "에네르기" 담론의 30% 수준에 달하는 9건의 기사가 제3유형에 해당한다. 제3유형은 제1유형보다 더 적극적으로 미국과 서방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비난한다. 미국은 “패권주의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이라크를 비롯한 주요 원유산지들을 가로 타고 앉아 제 리속만 차리고 세계의 일극화를 실현해보려”²⁸ 한다고 비난한다. 북극을 차지하려고 “에네르기 자원 쟁탈전에 미국, 캐나다, 단마르크” 등이 참여한다 하면서²⁹ 러시아와 분쟁하는 프랑스를 비난하기도 했다.³⁰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를 거치지 않고 카스피해 지역과 중동에서 가스를 공급받기로 협정한 “나부코(Nabucco)”³¹ 관련 비난 논조도 등장한다. 북한당국은 기사를 통해 냉전 이후 카스피해 연안국 사이에서 에너지 자원 선점 경쟁이 일어났는데 “이 기회를 리용하여 여러 대국들이 에네르기 자원확보를 위해 여기에 끼여들어 저들의 리기적 목적을 쟁기기 위한 작전을 벌렸다”³² 하고 평가한다.

반면 미국과 대립관계인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에 대해서는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 중이라며 우호적 입장을 보인다. 투르크메니스탄과 러시아, 카자흐스탄의 3국의 가스수송로 건설 협의에 대해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로씨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저들의 세력권을 확대하려는 미국과 서방의 시도가 실패하고 이 지역 나라들의 협조와 교류가 보다 적극화되고”(2007년 5월 23일) 있다고 서술하였다.

28 2005년 11월 8일, “민족적리익을 위한 독자적인 에네르기 정책”.

29 2007년 9월 4일, “맹렬해지는 에네르기 자원쟁탈전”.

30 2009년 11월 15일, “치열한 에네르기 시장 쟁탈전”.

31 정식 명칭 “The Nabucco Gas Pipeline Project” 이며 Blue stream이라고도 부른다.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감소시키고자 미국과 유럽이 시작한 에너지 수송 프로젝트이다. 러시아 영토를 거치지 않고 아제르바이잔과 같은 중앙아시아로부터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수송하고자 했다.

32 2009년 8월 31일, “가스배해지역의 에네르기 자원을 둘러싼 각축전”.

에너지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기조는 1970년대 초반 1차 석유파동 시기부터 나타났다. 그러나 대북제재 속에서 에너지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북한당국은 미국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 아울러 에너지 부족이 북한 홀로 겪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 각국이 다름 바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싶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다. 핵기술 보유 정당화 논리

2005년 이후 북한당국의 “에네르기” 담론에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핵 담론에 해당하는 제2유형이 또렷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점이다. 2006년 1차 핵 실험 이후 2007년 이후 “핵 에네르기” 같은 표현을 제목에 내세우며 다양한 핵 보유 정당화 논리를 만들고 해외사례를 핑계로 핵보유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시작한다.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 전후로 핵 에너지 관련 담론을 기재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실험 전인 5월 4일과 실험 당일인 25일에 핵 에너지 관련 담론을 게재했다. 이런 유형의 기사는 “평화적 핵에네르기 개발” 명분 아래 핵 보유를 정당화하려는 북한당국의 움직임을 드러낸다.

제2유형에 나타나는 논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지구온난화와 자원고갈 문제를 빌미로 “평화적” 핵에너지 개발·이용이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하며 핵보유를 정당화하려는 논리였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가물로 강과 호수의 물이 대폭 줄어 (2009년 11월 21일) 수력자원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핵 발전을 해야 한다거나 “풍부한 우라늄자원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도 원자력을 개발한다고 보도하기도 한다(2009년 8월 14일). 핵에너지 개발이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둘째, 핵 보유가 국가주권 문제라고 주장하는 논리도 등장한다. 이런 언설은 2009년 2차 핵실험 직후 연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하자 더욱 뚜렷해진다.

일부 서방세력들이 저들의 마음에 드는 나라들의 핵활동은 묵인, 협력하면서도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의 평화적 핵활동에 대해서는 터무니없이 걸고 들면서 압력과 제재소동을 벌리는 등 불공정한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로서 그들의 편견적립장과 지배주의 정책의 발로이다. 평화적 핵활동은 그 누구도 가룩막을 수 없는 국제사회성원들의 자주적 권리이다. (『로동신문』, 2009년 8월 14일)³³

결론적으로 2005년에서 2009년 사이 북한당국은 에너지 부족 문제의식을 지니고 중국, 소련 이외의 다양한 해외 재생에너지 개발 사례를 제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울러 에너지원 개발 명분으로 핵 보유를 정당화하거나 북한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미국의 대북 에너지 지원 감소³⁴ 상황을 문제 삼아 에너지 부족 원인을 미국 탓으로 돌리는 언설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6. 2010년 이후: “에네르기” 담론 분량 급증과 유형 다각화

2010년 이후 『로동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북한당국의 “에네르기” 담론 분량이 급증하고 유형도 다양해진다. 특히 2015년에는 관련 기사 분량이 최대치를 기록하며 “에네르기” 담론이 『로동신문』 1면에 등장하기도 한다.

가. 해외 기술 보도의 확대와 반미 담론 감소

2009년 하반기부터 정치적 해석보다 과학기술 측면에서 에너지를 다루는 방식으로 제1유형 내용이 변화하고 수량도 증가한다. “과학기술 증시” 구호를 내세우는 북한당국의 정책과 부합하는 현상이라 하겠다.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북한과 우호관계인 국가 중심의 범주에서 벗어나 프랑스, 뉴질랜드,

³³ 2009년 8월 14일, “국제적 추세로 되고 있는 핵에너지 개발”.

³⁴ Manyin, Mark E., and Nikitin, Mary B. (2008)

스위스, 독일, 스웨덴 등 서방 국가의 실명을 들어 재생에너지 사례를 보도하고 있다.³⁵ 정치적 해석 없이 생물에너지³⁶ 수소에너지³⁷ 등 새로운 에너지 기술개발 사례만³⁸ 보도하기도 한다.

북한당국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부문은 재생에너지와 자연에너지 관련 내용이다. [표 4] 내용은 2009년 이전, 2010년-2014년, 2015년-2018년 시기별로 기사 제목에 나타나는 주요 단어의 빈도수를 보여준다.

[표 3] 주요 단어 등장 빈도

	자연 에너지	재생 에너지	태양열, 태양빛	녹색	풍력	생물	지열	수력
2015-2018	25	6	8	4	1	0	0	0
2010-2014	1	9	2	1	3	3	0	0
2009년 이전	1	1	4	1	1	0	1	1
합계	27	16	14	6	5	3	1	1

단어 분포를 살펴보면 2015년 기점으로 재생에너지를 자연에너지로 표기하고 관련 기사의 수량도 급속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상세 에너지원 중 가장 자주 등장하는 항목은 태양에너지이며 풍력에너지는 2위로 나타난다. 수력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1980년대부터 북한당국이 주력했던 에너지이고 지열에너지와 생물에너지는 재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2010년대 초반 이후 더 언급하지 않는다.³⁹ 태양에너지는 북한당국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부문으로 열에너지, 빛에너지 모두 자주 등장한다. 제목과 아울러 기사 내용에 등장하는 재생에너지의 종류는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으로 다양하다. 조수, 지열, 오물을 이용한 전기 생산도 함께 나온다.

35 2011년 5월 16일; 2011년 6월 18일.

36 2013년 4월 28일, “생물질에너키와 그 리용”.

37 2016년 10월 26일, “적극화되는 에너키 개발 사업”.

38 2012년 11월 27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재생에너키”

39 2013년 4월 28일, “생물질에너키와 그 리용”.

제1유형 세부 내용도 그렇지만 2010년대 들어 반미반제 언설 감소 현상은 제3유형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30% 수준이던 비율이 2010년부터 2014년 기간에는 7.5% 정도로 내려갔고 2015년 이후 2.9% 지점까지 하락한다. 물론 비난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국의 “세계 에네르기 독점” 시도를 실패로 평가하고 (2013년 9월 28일) 러시아 주도의 “남부흐름(South Stream)”⁴⁰ 현상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2010년 3월 23일) 기사도 나타난다.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여전히 기술적 동태에 주목하기도 한다.

미 중앙정보국의 한 보고서에는 미국은 21세기를 미국의 세기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자면 미국은 중래의 항공기와 무기, 곡물의 독점이 아니라 에네르기 자원의 통수권을 쥐어야 한다 (중략) 혈암유, 혈암가스의 채취기술은 새로운 에네르기 시장 독점을 통한 세계 재패를 노리는 미국이 크게 의지하는 기본수단이다 (중략) 에네르기자원쟁탈전이 격렬하게 벌어지는 오늘의 세계에서 자기의 실정, 자기의 조건에 맞는 에네르기전략을 세우고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 (『로동신문』, 2016년 9월 20일)⁴¹

나. 핵 담론의 변화: ‘핵 에너지 개발’ 변명 논리에서 핵보유국 선전으로

해외 핵보유 사례를 들었던 2005년-2009년 시기와 달리 2010년 이후 노골적으로 핵기술 보유상황을 선전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2차 핵실험 다음 해에는 핵기술 보유를 당당하게 언급하고 핵반응의 개념과 장점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기사도 나온다.

최근 우리의 과학자들은 핵융합반응을 성공시키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중략) 불과

40 러시아가 미국주도의 Nabucco에 대항해서 시도한 해양 파이프라인 프로젝트(Offshore pipeline project)이다. 러시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그리스 등이 참여했던 천연가스 수송 프로젝트이다.

41 2016년 9월 20일, “에네르기 개발의 다각화를 통해 본 오늘의 세계”.

바람, 지열, 태양열 에너지는 널려져 있어 그것을 모아서 리용하자면 많은 품이 들며 또 이것만으로는 급격히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중략) 핵반응과정에는 화학반응에서와는 대비할 수 없는 막대한 에너지가 나온다 (중략) 핵융합기술은 최첨단 과학기술의 종합체로서 핵융합성구성과는 곧 그 나라 과학기술발전수준을 보여주는 표징으로 되고 있다. (중략) 우리나라가 핵기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연구에서도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제재와 압력을 받고 있는 속에서 우리 과학자들이 새 에너지 개발을 위한 돌파구로 되는 핵융합반응을 우리 식의 독특한 방법으로 성공시킨 것은 참으로 자랑할 만한 성과이다.(『로동신문』, 2010년 5월 15일)⁴²

위의 인용문을 살펴보면 국제 정치·경제적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핵을 보유했다고 선전하는 논리가 드러난다. 이외에도 원자력 관리 사례를 보도하는 기사도 등장한다. 해외에서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을 연기했다거나 핵 시설 재가동 사례, 우라늄 농축 사례를 보도하고(2011년 3월 7일)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원자력발전소안전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면 얼마든지 원자력발전소건설과 리용이 가능하다” (2011년 9월 18일) 같은 논리를 강조하였다. 원자력을 대신할 대체 에너지는 사실상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4월에 북한당국은 핵 발전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핵실험이 회차를 더할수록 핵을 에너지 관점에서 다른 담론은 줄어든다. 2013년 12월 이후 만 2년 2개월 정도 관련 기사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2016년 1월 4차 핵실험 이후 7월에는 북한당국이 다음 인용문을 신문에 게재했다.

세계적으로 핵을 리용한 테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핵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의무화한 국제조약이 발효되었다. 핵물질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42 2010년 5월 15일, “미래의 새 에너지개발을 위한 핵융합기술”.

규제한 이 조약에서는 핵물질뿐 아니라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원자력시설도 테로분자들과 범죄조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핵물질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원자력 시설을 파괴하려 하거나 핵물질을 승인없이 옮기는 것을 새로 포함시켰다.〔로동신문, 2016년 6월 13일〕⁴³

위의 인용문에는 북한당국이 핵 안보를 언급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스스로 “핵 테로분자들과 범죄조직” 집단과 거리가 멀다고 에둘러 표현한다. 이 기사 등장 이후 3개월 만인 9월 5일, 북한당국은 5차 핵실험을 강행한다. 북한당국은 한 달 반 뒤인 2016년 10월 26일 핵에너지가 친환경적이라고 강조하고⁴⁴ 더 이상 핵을 “에네르기” 차원에서 조명하지 않는다.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한다는 변명도 하지 않는다. 2017년 화성 15호 실험 이후 북한당국 스스로 핵보유를 선언하고 선전하기 시작하면서 “핵에네르기 이용” 논리를 내세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런 현상은 북한당국이 1950년대 이후 신문지면에서 줄곧 원자력 에너지 담론을 제시하고 1990년대 초반부터 주장해 온 “핵 에네르기의 평화적 리용” 명분이 핵무기 보유 정당화 논리 만들기 작업이었다는 예측을 입증한다.

다. 내부 기술 선전: 에너지 자립에 대한 강조

북한 내부의 에너지기술 개발 상황을 선전하는 제4유형은 2005년에 등장한다. 6.7% 수준이었던 관련 기사의 비율은 2010년부터 5년간 22.5%, 2015년-2018년 4년간 52.2%으로 급증한다. 제4유형 담론은 표면적으로 태양열, 수력,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소재로 다루는 형태를 보인다.⁴⁵

⁴³ 2016년 6월 13일, “평화적 핵에네르기의 개발리용을 위한 국제적 움직임”.

⁴⁴ 2016년 10월 26일, “적극화되는 에네르기 개발 사업”.

⁴⁵ Victor D. Cha, and David C. Kang(2003).

1) 2010년-2014년: 내부기술선전 담론의 증가와 인민생활향상 강조

제4유형은 평양, 대도시 공장, 내각 산하 기관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사례로 나타난다. 지열과 지하수 이용 사례로 열펌프를 이용한 건축물의 냉난방(통성기계련합기업소), 환기시설(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 지열 온실(함경남도탐사관리국), 온천 개발 사업(국가자원개발성) 사례가 등장했다(2011년 5월 9일).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2.8비날론련합기업소, 대동강맥주공장, 강서신발공장” 등 공장 단위의 에너지 개발 및 절약 사례도 나온다(2011년 9월 7일). 김정은 등장 직후에는 제4유형 담론을 통해 “인민생활향상” 강조 양상도 나타난다. 다음 인용문은 “에네르기” 담론을 통해 “인민생활향상” 주장을 펼치는 언술행위를 보여준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지난해 10월 이곳을 현지도 하시면서 주신 유희과 그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신 과업 (중략) 태양열물가열기가 제일먼저 설치된 만경대구역 남리부락에서 사는 한 로인은 1년 내내 집에서 더운물을 쓰니 정말 꿈만 같다고 말하였다. (중략) 의주군에 사는 한 주민은 태양열물가열기를 설치한 다음날 새벽 1시에 정말 한겨울에 더운물이 나오는가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 부엌에 나가 수도꼭지를 틀어보았는데 정말 뜨끈한 물이 나와서 자고있던 집안식구들을 다 깨워 함께 기뻐했다 (중략) 이제 다 로동당의 덕이고 과학기술의 덕이다. (중략) 뭐니뭐니해도 매일 손을 물에 적시며 부엌일을 하는 우리 녀성들에게는 태양열물가열기가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보배이다. (『로동신문』, 2013년 1월 14일)⁴⁶

46 2013년 1월 14일, “어디서나 좋아한다”.

하루훈련을 마치고 한증간이 달린 목욕탕에서 거뜬하게 목욕을 하고 나서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학습도 하고 텔레비전도 보니 정말 좋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 속에 겨울에도 추운 줄 몰랐습니다. 『로동신문』, 2015년 5월 6일⁴⁷

위의 인용문은 여전히 평양 내부에도 온수 급수가 원활하지 않은 전력 상황을 보여준다. 더불어 “에네르기” 담론을 통해 ‘시혜’를 강조하는 북한당국의 언술행위를 반영한다. 그러나 신문지면에는 “김정숙제사공장, 류원신발공장” 등 북한당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부 경공업 공장과 극소수 공동주택만 나타난다. 결국 제4유형 담론은 북한당국의 선전 목적을 달성하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⁴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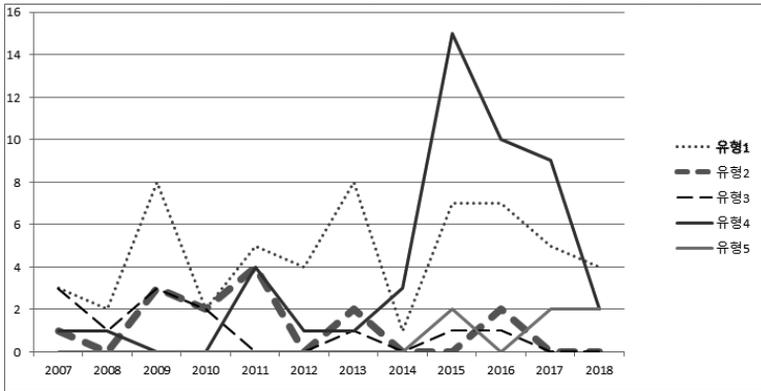
2) 2015년 이후: 국가전력을 위한 헌납 요구

2015년을 기점으로 내부 에너지 상황을 선전하는 제4유형 기사가 급증하고 해외 에너지 개발 사례를 보도하는 제1유형이 그 뒤를 따르는 현상이 나타난다. 2015년 이후 “에네르기” 담론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2007년 이후 연도별, 유형별 분포를 [그림 4]에 정리하였다.⁴⁹

47 2015년 5월 6일, “지열을 리용하니 얼마나 좋은가 - 평양 국제축구학교를 찾아서”.

48 통계청 북한통계를 살펴보면 2010년대 북한 에너지의 대부분은 여전히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석탄은 그 생산량 대비 화력발전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것은 결국 북한당국이 주민생활에 공급해야 할 석탄을 중국 수출용으로 전환시키고 수출규모를 급격하게 증가시켜버린 결과일 따름이다. 상세한 논의는 다음 참조. 빙현지, 이석기 (2017).

49 원자료: 통계청 북한통계(<http://kosis.kr/bukhan/index.jsp>, 2019년 11월 1일 기준).



[그림 4] 2007년 이후 유형별 “에너지” 담론 분포

2-1) 각종 행사와 “에너지” 담론

2015년에는 전체 “에너지” 담론 기사와 제4유형 모두 최대치를 기록한다. 2015년 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앞두고 북한당국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같은 구호를 앞세워 각종 성과를 올리도록 주문한 것 같다. 특히 과학기술증시 기초와 맞물려 에너지 과학기술 부문의 성과가 신문 1면에 나타나기도 한다.⁵⁰ “에너지” 담론 기사는 주로 『로동신문』 6면에 나오고 가끔 3면에 등장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북한당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치 이슈가 『로동신문』 1면에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에너지” 담론 기사를 1면에 배치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부문의 성과를 중요하게 다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2015년 이후 내부 에너지 개발 상황을 다루는 제4유형 기사가 해외 사례

50 2017년 10월 26일, “리용전망이 큰 에너지 절약기술 개발- 태양에너지 제품개발소에서”, 2017년 10월 22일, “에너지 절약형 중어장 새로 건설 - 평성시에서”, 2017년 9월 15일, “경제적 실리가 큰 에너지 절약기술 개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관리연구소에서”, 2016년 12월 3일, “자연에너지개발을 추동하는 자량찬 창조물”, 2016년 3월 13일, “우리식의 태양빛 에너지발전체계 개발 - 김일성종합대학에서”, 2015년 9월 5일, “어머니 조국에 드리는 자량찬 기술성과를 마련해간다 - 국가과학원에서”, 2015년 5월 10일, “자연에너지를 개발리용 - 평안북도에서”, 2015년 4월 28일, “자연에너지개발사업 적극 추진 - 강원도에서”.

를 보도하는 제1유형보다 더 많이 등장하기도 한다. 러시아와 해외교류 단신, 녹색건축 전시회 등 다양한 소재를 보도하는 것도 특징이다. 에너지와 관련한 과학기술 전시회는 다음과 같다.

[표 4] 2015년 이후 에너지 부문 과학기술 전시회 개최 내역

전시회, 날짜	참여 단위	분과	내용
전국록색건축기술부문 과학기술발표 및 전시회 2015.3.25-26	김일성종합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 이과대학, 국가과학원 건축공학분원, 국가과학원 자연에너지 연구소, 도시경영성 중앙난방 연구소	녹색건축, 자연에너지	재생에너지 개발 성과 보급
전국록색건축기술부문 과학기술발표회 2016.8.9-10	김일성종합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 국가설계지도국, 백두산건축연구원, 국가과학원 건축공학분원, 국가과학원 자연에너지 연구소	녹색건축 기술 전시 및 응용사례발표	령에너지, 제로탄소 및 지능 건축기술
전국자연에너지 부문 과학기술 성과전시회 2017.07.19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과학원 자연에너지 연구소, 전력공업성 전력공업연구소, 평양 이동통신운영국	자연에너지 개발이용 및 절약	과학기술 성과발표, 기술교류

2016년에는 제7차 조선로동당대회 전후로 많은 기사가 등장한다. 북한당은 과학기술부문 종사자를 향하여 당 대회 전에 “충정의 70일 전투” 참여를 요구하였다. 당 대회 이후에는 “충정의 200일 전투”⁵¹ 참여를 요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국가과학원” 명의로 3월에 70일 전투에서 100kW 풍력발전기를 개발했고 12월에는 200일 전투 기간에 250kW 풍력발전기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온다.⁵² 김정은이 여명거리를 현지지도하면서 “21세기 에너지 절약형거리, 녹색형 거리”로 조성하라고 강조하는 기사가 3월에 나오기도 했다. 그 일 이후 “령에너지(제로에너지), 령탄소(제로탄소), 녹색형(녹색건축)” 같은 표현이 나타난다. 2016년 5월 29일에 평양건축종합대학 실장이 녹색건축을 상

51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당국은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충정의 전투”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2016년 6월 1일 노동신문 사설 제목 “모두 다 충정의 200일 전투에서 영웅적 위훈을 창조하자”, 기록영화 “충정의 70일 전투” 등에서도 해당 표현이 나타난다.

52 2016년 3월 13일, “우리식의 태양빛에너지발전체계 개발”; 2016년 12월 3일, “자연에너지개발을 추동하는 자량한 창조물”.

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온다. 김정은이 연풍과학자휴양소, 과학기술전당 등 과학기술 관련 시설은 물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녹색” 담론을 강조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물론 이름은 녹색건축이지만 그 내용은 “환경보호, 자연친화” 논리보다 “에너지 절약” 면모를 강조하는 양상이 드러난다.

2-2) 자립에서 헌납으로

2015년 이후 제4유형 중심의 "에네르기" 담론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 주민이 에너지 부문에서 당국에 의존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자립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당국이 주민에게 에너지 부문에서 자립할 것을 요구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각자 자기가 속한 기관이나 기업소, 학교 등을 통해 당국이 책임져야 할 에너지 영역도 “자체로” 해결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2015년 이후 나타난 제4유형 기사 내용은 모두 개인과 단체, 기업이 당국의 도움 없이 에너지 발전·절약 설비를 만들고 설치하여 자체 수급에 성공했다는 사연을 전달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각 기관, 기업소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되 궁극적으로 잉여 생산 에너지를 “국가전력망에 넣어주는”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사연이 나온다.

(자강도에서) 여러 단위들에서 수차식 물뿔프를 자체로 제작완성하여 농업생산에 적극 리용(중략) 실정에 맞게 원가를 낮추면서 제작완성(『로동신문』, 2018년 2월 21일)⁵³

평성시에서 자연에네르기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자체로 기장한 전력문제를 풀기위한 된바람이 세차게 일고 있다.(『로동신문』, 2018년 6월 11일)⁵⁴

53 2018년 2월 21일, “자연에네르기를 적극리용”.

54 2018년 6월 11일, “수차식 물뿔프를 널리 받아들여”.

이 태양빛발전체에서 생산된 전기는 생산과 식당운영, 조명 등 경영활동 뿐 아니라 공장 탁아소의 난방보장에도 효과있게 리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국가전력망에도 넣어준다.『로동신문』, 2017년 10월 31일⁵⁵

과학기술보급실과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통하여 과학기술을 배우면서 환경보호형 도로청소기도 자체로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중략) 종업원들은 도로에 쌓이는 눈을 치내는 계절기날도 자체로 연구도입하고 각종 도로바닥표식선들을 그 기술적 요구에 맞게 도색할 수 있는 성능높은 기계도 창안도입 (중략)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필요한 모든 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로동신문』, 2017년 2월 26일)⁵⁶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면 자재 가격이나 설치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데 아무런 지원 없이 스스로 에너지를 공급하라고 하니 기관과 기업소 구성원이 희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런 현상을 시사하는 내용이 『로동신문』 기사에 나타난다. 결국 소속 구성원이 모두 재원을 헌납하고 지배인 등 책임자가 상당한 수준의 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일군들 속에서 의견도 제기되었다. 현재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수행하자고 해도 자금이 드는데 한두개도 아니고 수십개의 태양빛전지판을 마련하자면 많은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때 지배인 한홍철 동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금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양빛전지판을 가지고 조명문제를 해결한다면 나라의 전기가 절약되고 그만큼 석탄생산에 효과적으로 쓰일 것이 아닙니까. 힘들어도 탄광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중략)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5월까지 상반기도 계획을 완수할 신심드높이 석탄증산투

55 2017년 10월 31일, “에네르기절약형통합생산체계가 구축된 공장의 새 모습”.

56 2017년 2월 26일, “태양빛에네르그리르 적극 리용 - 락량구역도로서설관리소에서”.

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로동신문』, 2016년 1월 16일)⁵⁷

많은 사람들이 놀라와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태양빛전지판만 해도 18개는 있어야 했던 것이다(중략)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이 태양빛전지판, 축전지확보 등 제일 중요한 문제들을 맡아안고 뛰고 또 뛰었다. 종업원들도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면서 태양빛전지에 의한 동력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보조장치들과 부속품들을 해결하기 위해 애썼다.(『로동신문』, 2015년 11월 13일)⁵⁸

기관이나 기업소 차원이 아니라 북한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할 때에도 당과 내각이 아니라 국가과학원 차원에서 자원과 자재를 조달한다고 한다. 특히 태양에너지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패널을 모두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국가과학원 산하 강흥기술무역회사가 자재 조달을 책임졌다는 것이다.

전기연구소와 자연에너지 연구소, 전자공학연구소, 기계공학연구소의 과학자들과 일군들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자연에너지발전소를 내놓고(중략) 강흥기술무역회사 과장 주영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을 발휘하여 필요한 중요설비들을 제 때에 원만히 보장하였다.(『로동신문』, 2015년 9월 5일)⁵⁹

결국 기관이나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인이 만든 설비를 구매하거나 국가과학원이나 연구기관에서 기술을 배운 뒤 자재와 원료를 구해 직접 만드는 방법으로 자체 에너지 발전을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2010년 이후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북한당국이 강조해 온 “전민 과학기술인재화” 방향

57 2016년 1월 16일, “자연에너지기러용을 실정에 맞게, 고원탄광에서”.

58 2015년 11월 13일, “태양빛 에너지를 적극 리용하여 - 정방산 버섯공장에서”.

59 2015년 9월 5일, “어머니조국에 드리는 자랑스런 기술성과를 마련해간다 - 국가과학원에서”.

과 일치한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북한당국 소유이지만 그 발전소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경비는 모두 민간에서 담당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 구조는 가장 중요한 설비를 모두 해외에서 수입해 온다는 점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보여준다. 설비를 자체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은 물론 필요 자재도 모두 중국에서 들여와야 발전소 건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곧 북한당국이 요구하는 자립은 중국에 의존해야 가능하다는 모순을 내포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2015년 이후 북한당국은 “에네르기” 담론을 통해 전기를 “국가 전력망에 넣는” 헌납까지 요구해 왔다. 주민이 자생하는 시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에너지 부문에서도 일종의 세금을 걷으려 한다는 뜻이다. 이 현상은 의식주 부문을 넘어 기간산업 부문에서도 당국보다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모해 갈 가능성을 시사한다.

IV. 결론

이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공적영역에서 “에네르기” 표현이 급증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시대에 따라 북한당국이 “에네르기” 담론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밝히고자 해방 이후 2018년까지 제목에 해당 용어가 등장하는 『로동신문』 기사를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대 초반까지 『로동신문』 기사에 “에네르기” 담론의 비중은 크지 않았다. 북한당국이 “전력, 전기” 등 구체적 단어를 사용하며 “에네르기” 용어는 전후 주민동원, 석유파동, 소련 핵기술, 6차 당대회 직후 해외 재생에너지 개발 사례 등 특정 사안에 국한하여 등장한다. 반면 2000년대 중반 이후

핵 개발, 해외 재생에너지 개발, 국제적 에너지 분쟁 등 대외적 의제가 증가하면서 “에네르기” 담론이 급증한다.

둘째, 1950년대 당시 소련의 핵기술을 보도하던 북한당국은 1990년 이후 본격적으로 핵 “에네르기” 담론을 생산한다. 원자력 발전을 명분으로 핵무기 개발 의혹을 부인하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이어지자 2005년 이후 반미기조를 강화하고 국가주권과 효율적 에너지원 개발을 명목으로 핵보유를 정당화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대 후반에는 아예 핵기술 보유를 노골적으로 선전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나타난다.

셋째, 에너지 관련 해외동향 언설은 1970년대 석유파동 시기 잠시 나타났다가 2002년 “악의 축” 규정 이후 반미반제 담론으로 변화하면서 러시아, 중국 사례에 천착하다가 2000년대 중반에 아프리카, 아랍, 비동맹국의 에너지 개발사례에 주목하였다. 2000년대 후반에는 정치적 비난을 줄이고 서방 세계의 다양한 대체에너지 동향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넷째, 북한당국이 주민을 상대로 에너지와 관련하여 제시했던 지침은 절약에서 자립, 자립에서 헌납으로 심화한다. 1990년대 말에는 재생에너지 기술로 에너지를 절약하라고 권하다가 2010년대 초반에 일부 시범 사례를 통해 “인민생활향상” 선전을 시도하며 에너지 자립을 요구하였다. 특히 내부사례 보도에 비중을 두기 시작하면서 2015년부터 아예 자체 생산한 전력을 국가에 헌납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중시 기조와 함께 기관, 기업소, 공장이 에너지 부문에서 자립 차원을 넘어 “국가전력망에 전기를 넣을” 것을 강조하는 기사가 급증한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지난 70여 년간 북한당국이 점차 에너지 부족 문제를 겪으면서 대체 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을 깨달은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방안을 깊이 고민했던 것 같지는 않다. 실제로 핵무기만 개발하면서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변명하는 등 해외 재생에너지 개발 사례도 정치적 관점에 천착한 측면이 강하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당국은 표면적으로 과학기술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개발을 강조하지만 그 이면에 기관, 기업소, 단체, 개인에게 “자체로 살 것”을 강조한다. 당국 차원에서 재정을 소요하거나 대북제재 완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주민이 사용할 석탄은 중국으로 수출하고 전력운용 같은 사회기반 시설의 운영도 주민에게 떠맡기려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당국이 방치한 것과 다름없는 민간 에너지 영역이 해외에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북한당국에 현납하는 에너지 또한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호제. “북한 핵개발 60년史... 월북 물리학자 도상록이 주도.” 『프레시안』. 2013년 2월 13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5884>. (검색일: 2016. 04. 21)
- 경향신문. 1973년 9월 5일. “오늘부터 8일까지 石油 파동 속 非同盟 頂上 회의.”
- 김경술. 2018. “북한의 에너지 인프라 현황과 향후과제.” 『국토: planning and policy』 443권.
- 김경술. 2015. “북한 민생용 에너지 문제 해결방안.” 『KDI 북한경제리뷰』 제17권 3호. 『로동신문』 1946. 12. 06 ~ 2018. 06. 30.
- 박우일 외. 2007. 『생태기술』.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빙현지·이석기. 2017. 『북한 재생에너지 현황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 안세현. 2013. “북한의 에너지안보 구축.” 『국제관계연구』 18권 1호.
- 『연합뉴스』. 2019년 11월 1일. “석탄 수출길 막힌 北, 화력발전으로 전력생산 독려.”
- 이중구. 2018. “KEDO의 해체와 북한 핵에너지 정책의 방향전환 : 국제적 핵통제 금정론에서 국제적 핵통제 부정론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2권 2호.
- 정현숙. 2018. “1950~1960년대 북한의 ‘핵잠재력 확보전략’에 관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21권 2호.
- 통계청 북한통계. <http://kosis.kr/bukhan/index.jsp>. (검색일: 2019. 11. 01)
- 황성규. 2003. “언어 생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새국어생활』 13권 2호.
- Manyin, Mark E., and Nikitin, Mary B. 2008. “U.S. Assistance to North Korea.” *CRS Report for Congress*(RS21834).
- Spector, L. S., and Smith, J. R., 1991. “North Korea: The Next Nuclear Nightmare.” *Arms Control Today* 21(2).
- Victor D. Cha., and David C. Kang. 2003.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박민주 · 김석향, 북한 “에네르기” 담론의 변천사

(투고일: 2019.11.29, 심사일: 2020.1.26, 게재확정일: 2020.3.23)